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길



朱 信 基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1997년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책 등을 기본으로 복지·교육·노동 부문을 포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당시로는 이와 같은 계획수립 자체가 획기적이었을 뿐 아니라 복지는 물론 노동·교육까지 연계해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히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바로 이 장애인복지 중기계획안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게 된다. 물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중간평가가 뒤따르겠지만 세부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부체감지수로 말한다면 5년전의 장애인복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저 5개년 계획의 가장 포괄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부문의 경우 지역재활시설 등의 하드웨어부분이 수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증가된 장애인구와 비교할 때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폭은 그다지 넓어

지지 않았음이 현실이다. 또한 1995년 당시만 해도 11만원 정도에 달하는 장애인가구의 추가생계비 부분을 계획기간내 장애수당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들까지도 내부장애확대로만 그쳐 여전히 숙제로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 외의 제반 복지인프라인 의료영역이나 최저생활보장부분은 건강보험재정 난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서 장애인가구의 수급권 탈락으로 오히려 퇴보한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교육재원의 확보, 재활복지대학개설로 장애인고등교육을 포함한 장애인 교

육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중·고등 특수학급의 절대 부족,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저조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통합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및 학습지원책 미비로 고등교육의 교육여건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던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이나 '장애인학생자원봉사인력은행' 등의 계획은 내부에서 추진중일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그 추진된 흔적조차 찾기 어

렵다. 더욱이 양질의 특수교육교원확보를 위해 대학원중심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나 직업교육 강화 등은 그 추진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분야의 경우 5개년계획 추진과정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변수가 초래되지 않은 부분들을 평가해 볼 때 직업전문학교 건립, 직업능력평가센터 등의 하드웨어부분들은 일정 정도 추진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것이다. 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은 과감하게 파기하는 결단과
지금이라도 차기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러나 그 외 사업주 고용촉진지원이나 장애인근로자 취업생활지원 확대 등은 올해 예산 삭감으로 오히려 퇴보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평생지원의 포괄적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복지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분에 있어 가장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해 볼 때 오히려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이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때보다 더 낮아진 데 반해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는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제반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대다수 재가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체감지수를 더 낮게 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이 미약하거나 아예 추진실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사장(死藏)된 계획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계획을 둘러싼 관계부처의 추진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정부는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나 점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관계부처 실무담당자조차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었는지 혹은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불

과 1여 년을 남겨두고 있다. 대부분 예산지원과 장기간의 추진이 뒤따라야 하기에 연내에 미진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은 과감하게 파기하는 결단과 지금이라도 차기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나가는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난 5개년 계획이 차기 5개년 계획에도 이어져 10년 동안 장애인복지가 정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포럼의 기획을 통해 조금은 냉정할지라도 냉철한 평가가 뒤따라 해당 부처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매듭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리